

2023년 5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김홍태	5/7	[출발600]전세사기 주범 '깡투기'...서울 강서구 전국 최다 [뉴스프라임]최우선변제 배제 피해자 70%...정부는 "선지급 없다"	
임윤주	5/14	[뉴스08] 덜 자고 더 공부하는 어린이들...행복지수 '빨간불' [뉴스오늘] '우울증겔러리'서 만난 10대들 극단선택 시도...SNS 중계	
이동준	5/21	[뉴스프라임] 청와대 개방 1년...정밀 조사 필요성 등도 여전 [뉴스워치] 아이유 측, 표절의혹 제기 "이미지 흠집 내려는 것"	
임윤주	5/28	[뉴스 리뷰]안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높이·구역 제한한다 [뉴스 투나잇]'보행자 위협' 정당 현수막 제한...여전히 '난립'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사임	이동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2023. 01. 31	홍콩 린남대학교 출강에 따른 자진 사임
활동	안지연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2023 .01. 31	
신규	박세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2023. 05. 31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3 5/7(일)	김홍태	지난 달 24일 뉴스프라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사기피해를 세금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명확한 선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은 2,479채, 하지만 이 집에 전세를 든 세입자의 약 70%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데요, 구속된 '건축왕' 남모씨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 주택을 계속 짓느라, 대부분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탓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기피해를 세금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강통전세'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피해 예방, 피해 복구 지원, 단속과 처벌 강화방안이 담긴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을 마련했었는데요, 악성 임대인 명단 등 정보가 담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선 순위 권리관계 정보나 임대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낮은 금리로 긴급 자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으며, 경찰청 등과 협조해 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 단속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후 작년 12월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가 사망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들은 주로 2,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빌라 수십채를 보유한 임대인의 사망 소식, 그리고 피해자인 임차인들의 사망 소식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전세사기는 이러한 흐름을 짚어가면서 차근차근 문제점들을 짚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는 지난해 시작된 이래 매우 장기간 다뤄진 소재로, 그간 정부 정책이나 피해 현황(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현황 포함) 보도 외에 저희 탐사보도프로그램 '뉴스프리즘'을 통해서도 전세 사기나 전세 제도의 문제 등을 2차례 다룬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정책 최고 책임자가 공개석상에서 전세사기 피해에 재정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고 공언한 것은 그 자체를 주제로 다룬 만한 보도로 판단됩니다. 반면, 한 리포트 안에 그간의 진행 상황을 모두 다시 전개해 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5월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입법안 확정 관련 발표 외에 피해자 입장에서 "등본 떼보니 압류"...세금 체납에 임차인만 피해(1일)/'바지사장'에 넘겨도 전세사기...동탄-구리 포함은 미지수(2일)/발 묶인 전세사기 특별법...피해자 "보증금 채권 매입을"(11일)/'빛에서 꺼내달라'는데 이자 혜택만 강조..."반쪽 특별법"(26일) 등 매우 여러 편의 리포트를 보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3 5/14(일)	임윤주	연합뉴스TV가 아동 행복과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여 보도한, 5일 오전 8시 뉴스 내용 살펴보겠	리포트 내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의 인터뷰 싱크가 포함돼 있어 CG 내에 별도로

		습니다. 보도는, 어린이들의 하루 일과를 분석해 행복감을 수치화한 '아동행복지수'에 대해 전했습니다. 아동행복지수는 아동·청소년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을 조사한 결과로, 이번 결과는 4점 만점에 1.66점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1.68점, 2022년에는 1.7점으로, 최근 3년 중 최하점을 기록한 것입니다. 일상을 분석해본 결과, 덜 자고 더 공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2021년 발표된 결과와 비교하면, 수면 시간은 23분 줄었고, 공부 시간은 44분이 늘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경우, 그 이유로는 '학업 스트레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행복지수가 낮은 아동들일수록 늦은 밤까지 잠들지 못하고, 고립된 시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놀이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서 인용한 '아동행복지수'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 속 균형을 분석하여 매년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아쉽게도 리포팅 내용과 자료화면으로 제공된 그래프에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보도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고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당 지수는 비슷한 이름의 다른 조사 결과들이 존재하고 있어, 더 신중해야 하는데요. 비슷한 이름의 다른 조사 결과들이 각각의 지수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최근 3년간의 지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에서 만점 및 단위 표기를 해주는 등 자료 활용 시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게 취재기자의 실명입니다. 그러나 기사의 신뢰도 차원에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데스크 과정에서도 기사 내에 또는 CG에 출처가 표기돼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5/21(일)	이동준	지난 12일 방송된 뉴스워치에서는 가수 아이유가 음원 표절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아이유 측이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일 "고발인은 작곡가가 아닌 오로지 아이유만을 상대로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고발인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고발 대상이 된 곡은 '분홍신'과 '좋은 날', '뽀뽀' 등 6곡이며, 고발인은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이유의 표절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표절의 정의와 해석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음악 작곡	말씀하신대로 이번 사안은 다소 특이한 사례였습니다. 고발한 인물이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었던 데다, 표절관련 고발을 하려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아이유를 고발한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아이유의 소속사측에서도 이번 고발 사안이 '흠집 내기'에 목적이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번 사안은 다른 표절시비와 달리 사안이 계속 커지거나, 유사점을 비교

		<p>의 주관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유사성만을 기준으로 표절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업계 내에서 공유되는 창작과정의 특성이 이러한 유사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저작권 소유자와 무관한 일반 시민에 의해 고발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표절 사건은 일반적으로 원저자 또는 법에서 지정한 개인이 직접 고소해야 하므로 제3자 고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법적인 측면과 음악의 창작 특성을 모두 고려한 조사가 중요합니다. 아이유 표절 논란의 해결 여부는 가수의 명성회복 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 내에서 유사한 분쟁을 처리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역시 이러한 다양한 사안의 관점을 더욱 자세하게 다뤄서 단순한 의혹의 전달이나 나아가 논쟁을 확산하는 것이 아닌 그 해결과 이해를 위한 매개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요계 표절 분쟁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후속 보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p>	<p>하는 등의 후속 반응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고발 사안이 종결되지 않았으니 앞으로 이번 사안을 계속 위치하면서 후속보도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가요계에서 종종 표절 논란이 발생하곤 하는데 언급해 주신 바대로 가요계 표절 사건에 대한 해결과 이해를 위한 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기사를 검토하겠습니다.</p>
<p>2023 5/28(일)</p>	<p>임윤주</p>	<p>18일 <뉴스 워치>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독사는 2017년 2,412건에서 2021년 3,378건으로 약 40% 급증했습니다. 특히, 2021년엔 고독사의 59% 가까이가 50~60대였습니다. 이에 정부가 돌봄 서비스를 통한 중장년 고독사 감축 방침을 내놨습니다. 목표는 재작년 사망자 100명당 1.06명인 고독사 수를 4년 뒤 0.85명까지 20% 낮추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중장년을 대상으로 돌봄, 병원 동행 같은 일상생활 부담을 경감해주는 생활지원 서비스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력 사용량이 현저히 줄면 안부를 묻거나, 이장·반장·통장 등 지역 대표자들을 고독사 예방 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복지부는 고독사 실태 파악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브리핑 전문을 살펴보면, 정부는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와 실태조사 등으로 고독사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두었습니다. 다양한 내용 가운데 연령 분석 결과 전달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p>	<p>청년 고독사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나 '고독사'란 말이 나온 일본은 물론, 현재 한국도 고독사의 60% 가량이 중장년에 집중되었습니다. 정부는 5년 내 고독사 20% 감축 목표를 갖고 있는데, 따라서 고독사 감소 정책 중심이 중장년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년 고독사는 20대의 경우 56%, 30대는 40%가 자살에 의한 것으로, 정부는 5년인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해 점검하는 대책을 이번엔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자살 비중이 큰 만큼, 이번 고독사 대책 외에 이전에 발표된 자살 대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p>

		<p>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이 연령별 차이였고, 이를 전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정보의 중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자칫 고독사 대책이 아닌 중장년 대책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고독사에는 연령 변수보다는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는 환경 변수가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분석은 19일 <뉴스 현장>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대담에는 조미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이 함께 했습니다. 조미정 전문위원은 고독사 위험군이 152만명에 달한다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고독사 사망 사례에 어떤 이들이 포함되었느냐를 더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고독사의 비중은 주로 독거노인이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연령과 다소 상관없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독사 비율이 가장 높은 50~60대 중장년층에 대해서도 부모의 사망, 자녀의 독립, 본인의 퇴직 등 주변의 변화가 가장 큰 세대로 이러한 부분에 집중하여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고독사 위험군이 1인 가구 5명 중 1명꼴로 분석된 가운데, 해당 수치가 어떻게 도출된 결과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조사 대상이나 분석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되었으나, '위험군'을 분류한 기준도 함께 설명해주었다면 수치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p>	
--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3. 05. 07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597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에서 깡투자가 많이 이뤄졌다고 전하였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기 범죄 피해에 대하여 앞으로 국가가 떠안는 그런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의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면서, 유명 연예인들의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집단소송과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당국의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달 24일 출발600에서는, 전세사기는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이른바 깡투기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3년 동안 가장 많은 깡투기 계약이 이뤄진 곳이 빌라왕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서울 강서구라고 전했습니다.

집값과 전세가율이 별 차이가 안 나 전세금을 받아 소액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투기를 깡투기라며, 최근 3년 동안 전국 12만여건에 달하는 깡투기 가운데 서울 강서구에서만 약 6천건에 달하는 깡투기 거래가 맺어졌다는데요, 특히 화곡동에서만 강서구 전체의 70%가 넘는 깡투기가 집중됐다고 전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의 주요 무대였던 주안동에서도 읍면동 기준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깡투기 거래가 이뤄졌다는데요, 이 같은 깡투기 거래들이 빌라와 오피스텔 등 저가형 주택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서민층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전합니다. 특히 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전세사기들은 집값이 고점에 달했던 재작년 계약이 맺어진 경우가 많아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달 24일 뉴스프라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사기피해를 세금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명확한 선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은 2,479채, 하지만 이 집에 전세를 든 세입자의 약 70%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데요, 구속된 '건축왕' 남모씨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 주택을 계속 짓느라, 대부분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탓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기피해를 세금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경매시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는 근저당 설정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재계약 과정에서 대다수가 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인천시는 서울 강서구와 달리 근저당 피해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전향적인 대책을 요구했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기 범죄에 대해서 앞으로 결국 국가가 떠안을 거라는 그런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단체는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 특별법에 한계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LH 예산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할 게 아니라,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확인해 사서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지게 하고 이후 보증금을 건축업자들에게 환수하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깡통전세'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피해 예방, 피해 복구 지원, 단속과 처벌 강화방안이 담긴 이른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을 마련했었는데요, 악성 임대인 명단 등 정보가 담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선 순위 권리관계 정보나 임대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낮은 금리로 긴급 자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으며, 경찰청 등과 협조해 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 단속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후 작년 12월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가 사망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들은 주로 2,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빌라 수신택을 보유한 임대인의 사망 소식, 그리고 피해자인 임차인들의 사망 소식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전세사기는 이러한 흐름을 짚어가면서 차근차근 문제점들을 짚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전세 사기는 실제 깡통전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금리 상승 등으로 집가격이 내려가고 있어 전세보증금이 집의 매매가보다 높거나 비슷한 경우가 문제된다고 합니다. 특히 주택에 선순위 담보가 설정된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되고 있다는데요, 계속 강조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 계약을 할때 집주인을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부 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하고 국가 공간정보 포털을 이용해 이를 소개해준 중개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대조하여 계약하고, 임대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 위임장 등을 분명히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시가를 확인하고 주택의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전세보증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역에서 전세사기가 문제되고 있으나, 개인적 범죄 영역에 속하는 사기범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가 떠안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어고 있는 상황이기에 임차인 개개인이 주의할 점을 분명하게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지난 달 28일 뉴스리뷰에서는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의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면서, 유명 연예인들의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집단소송과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당국의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계 SG증권의 대량 매도 사태로 국내 증시가 휘청이면서 투자자들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관계당국은 여기에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검찰 등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일당의 투자자문업체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최근 압수수색했는데요, 해당 업체는 투자자들의 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물량과 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하는 수법으로 일부 종목 주가를 띄우고, 당국의 조사에 급히 매도해 주가를 폭락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 자문을 한 혐의로 해당 업체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앞서 관계자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사무실에서 나온 휴대전화 200여대를 긴급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명 연예인들의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주가조작 의심 세력에

계 30억여원을 투자해 1억 8천여만원이 남았다고 밝힌 가수 임창정 씨에 이어, 가수 박혜경 씨도 피해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앞서 일당 10명을 출국금지한 검찰은 곧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핵심 인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 본격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달 29일 뉴스투나잇에서는 대형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 CFD의 신규 가입과 매매 중단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증권은 26일 국내외 CFD계좌의 신규 매수, 매도 주문을 중단한데 이어 지난 달 27일 오후 6시부터 가입도 일시 중단했으며, 한국투자증권도 국내외 CFD 계좌의 신규 매매를 중단하고 잔고에 대한 청산매매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현물 주식 없이 기초자산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CFD는 최대 2.5배의 차입 투자가 가능하지만,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CFD는 차액결제거래라고 하는데요, CFD계좌에서는 투자금액의 2.5배까지 주식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주가가 오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리면 문제가 크게 되는데요, 주가가 40퍼센트만 내리면 자본금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주가폭락사태에서 투자자들이 미처 돈을 빼지 못한다면 원금보전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빚을 안게 됩니다. CFD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고 현재 다양한 국가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지렛대를 이용한 거래를 통해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의미합니다.

현재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로 유명 연예인까지 피해를 입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서울도시가스 회장이 폭락직전 대규모로 주식을 매각하여 더욱 의구심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폭락사태가 작전세력에 의한 주가조작이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지만, 먼저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태를 왜 막지 못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폭락사태를 막는 메커니즘은 어떠한지도 짚어야 할 것인데요,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현재 기존의 주가 조작과는 그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조작 징후는 거래소가 먼저 포착을 하고, 이상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금감원에 또는 사안에 따라서는 금융위원회에 알리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가조작은 단기에 급등하고 빠져나가는 패턴을 보이는데, SG증권은 긴 기간 조금씩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거래량이나 가격 등이 기존의 이상거래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고 따라서 사전에 포착이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어떠한 형태의 주가조작인지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판단해 볼 문제이지만, 현재 외부에 드러나는 정황들은 분명 CFD거래의 문제점으로만 설명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주가조작단 핵심관계자들의 주가조작 관련 증언이 나오고

있는 만큼 충분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 나아가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나오길 희망합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3. 05. 14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98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5월 5일은 101번째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이 법정제정일로 제정된 지 100년이 넘는 지금, 어린이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연합뉴스TV가 아동 행복과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여 보도한, 5일 오전 8시 뉴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어린이들의 하루 일과를 분석해 행복감을 수치화한 '아동행복지수'에 대해 전했습니다. 아동행복지수는 아동·청소년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을 조사한 결과로, 이번 결과는 4점 만점에 1.66점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1.68점, 2022년에는 1.7점으로, 최근 3년 중 최하점을 기록한 것입니다.

일상을 분석해본 결과, 덜 자고 더 공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2021년 발표된 결과와 비교하면, 수면 시간은 23분 줄었고, 공부 시간은 44분이 늘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경우, 그 이유로는 '학업 스트레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행복지수가 낮은 아동들일수록 늦은 밤까지 잠들지 못하고, 고립된 시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놀이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서 인용한 '아동행복지수'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 속 균형을 분석하여 매년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아쉽게도 리포팅 내용과 자료화면으로 제공된 그래프에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보도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고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당 지수는 비슷한 이름의 다른 조사 결과들이 존재하고 있어, 더 신중해야 하는데요. 비슷한 이름의 다른 조사 결과들이 각각의 지수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최근 3년간의 지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에서 만점 및 단위 표기를 해주는 등 자료 활용 시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결과도 전했는데요. 10대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또 다른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7일 <뉴스 오늘>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17세 소녀 1명과 15세 소녀 1명이 새벽 4시쯤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그 과정을 SNS로 생중계 하다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이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설득 끝에 보호자에게 인계했습니다.

기자는 지난달에도 '우울증클리닉'에서 활동하던 한 10대 학생이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며 SNS로 중계를 하고, 이를 수십 명이 시청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10대들의 자살 충동 뉴스가 잇따르고 있어, 시의성 등 충분히 보도 가치가 있는

뉴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단신 뉴스이긴 하나 지나치게 많은 정보들이 구체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자살 시도를 한 10대의 나이, 성별, 장소 등이 명시되었고, 만나게 된 계기인 우울증 갤러리와 SNS로 중계하였다는 부분도 언급됩니다.

한국기자협회의 자살 보도 지침에 따르면 구체적인 장소나 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의 마지막 지적은 자칫 유행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최근 10대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위험성을 전하고자 했다는 점, 이들이 만난 '우울증 갤러리'의 강제 차단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보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표현에 있어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우울증 갤러리' 차단 논란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보도하였는데요. 그 가운데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전달한 대담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2일 <뉴스현장>입니다.

대담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울증 갤러리 차단과 관련하여, 의견 나누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이번 문제가 비단 얼마 전 있었던 1건의 청소년 자살 사건만이 아닌,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문제임을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자살 방조 혐의 뿐만 아니라 성범죄나 마약류 범죄까지도 번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지난달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우울증갤러리 차단을 요청하였으나, 방심위는 법률 검토를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교수는 방심위의 판단은 매우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모방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자살 정보들이 올라오고, 관련한 범죄가 진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 속에서 너무 보수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 외 이수정 교수는 플랫폼의 자체 정화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등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울증 갤러리 폐쇄와 관련한 이슈는 단순히 10대 자살 방조 문제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꺼안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가출, 자살, 그리고 성인의 자살 방조는 물론 성범죄와 마약 등의 사건들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문제, 나아가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이슈입니다. 본 대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언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자살 등의 사건 사고 문제가 아닌 다양한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로, 연합뉴스TV에서는 다양한 보도를 통해 이를 전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진행 중인 이슈로 앞으로도 신중하고 다양한 차원에서의 보도 부탁

드립니다.

우리나라 외교 문제에 있어서 최근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일 문제, 그 가운데 오염수 방출 문제일텐데요. 먹거리와 식수 등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과 관련하여 보도한 8일 <뉴스위치> 살펴보겠습니다.

한일 양국은 조만간 국장급 회의를 열어 23일 예정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 규모와 대상,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년 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토팀을 꾸리고 자체 분석을 해왔는데, 이번 시찰도 이들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시찰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빠른 실무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사찰의 핵심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화시설의 성능 검증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해양수, 해저토 등 우리가 원하는 지점의 시료를 원하는 만큼 확보해 검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본이 어느 정도 협조할지는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기사는, 결국 국민들의 불안 해소 여부는 정부의 협상력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번 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본 보도 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및 그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보도를 전했습니다. 보도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정부가 구성하여 파견하는 시찰단 활동 범위의 독립성 보장 등이, 이번 논의의 관건입니다. 이들이 후쿠시마 원전 내 주요 시설과 정보에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지, 얼마나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시찰단 파견에 합의를 한 것만으로도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정부의 협상력만이 아니라, 협상력을 발휘하기 전의 사전 준비도 철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구성하는 시찰단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만큼, 국민의 불안감이 큰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취재하여 보도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제목(헤드라인)과 관련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돈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 외 2명에 대해 증상과 경상을 입혔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 3명 모두 중국 국적 동포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지인 간 금전 문제로 다투다 살인을 벌이게 된 사건 보도입니다. 중국동

포라는 단어는 관련 사건보다는 가해자의 소속에 더 눈길을 끌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범죄뉴스 헤드라인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 사람들의 정서, 사회적 위험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특정 프레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준 시청자평가원(23. 05. 21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99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청와대는 권력의 공간에서 공공의 공간으로 탈바꿈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청와대 변화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연합뉴스TV는 개방의 의미와 과제를 다뤘습니다.

지난 5월 8일 뉴스프라임에서는 청와대를 다녀간 관람객이 340만 명을 넘어섰다고 전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청와대 개방 초기에는 사전 예약만 받았지만, 이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외국인들의 현장 관람도 가능해졌고 사전 예약 없이도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고 기사는 말합니다. 또한 청와대를 직접 보니 정말 감동했다. 여러 대통령들이 이곳에서 살았고, 역사의 현장을 밟을 수 있어서 영광이라는 외국인 관람객의 인터뷰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각적 풍광 위주로 이뤄졌던 청와대 관람을 역사와 문화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관람으로 바꾸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미 초기 개방 효과는 누린 만큼 관람을 일부 제한하고, 차별화된 콘텐츠와 청와대 관리 및 보존에 대한 장기적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운영과 활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청와대를 세계적인 역사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안내 시스템과 시설을 개선하고 K-관광의 대표적 상징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종섭 장관은 2년차에는 청와대만의 품격과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와대 체험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목표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부족한 휴식 공간과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등의 문제로 인해 방문객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고 영빈관 출입 제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전시물 부재 그리고 불충분한 안내와 설명은 건물의 역사적 맥락과 동떨어진 느낌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역대 대통령 상징물 전시 및 오디오 가이드 제공 계획이 아직 시행되지 않는 등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서비스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실제 활용도와 그 의미에 대한 인식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와대를 존경받는 문화유산이자 아름다운 공간으로 여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기억과 연관시킵니다. 청와대가 민주주의 교육과 화해의 공간인지, 전직 대통령

의 유산을 보존하는 성역일지, 아니면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더욱 적절인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습니다. 다만 청와대를 관광 공간으로 브랜드화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청와대의 보존과 효과적인 관리라는 중요한 측면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대중의 접근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활용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내 상업적 활동을 금지하는 기존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상업적 활용 허가로 인해 절차적 문제가 제기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상징적 의미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 합니다.

국가 브랜드이라는 미명하에 문화 정책과 문화 산업의 통합은 종종 근본적인 목표와 의도보다 피상적인 요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충동적인 정책 기획과 집행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수립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1년 전 청와대 개청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지금도 청와대 개방과 용산 이전을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람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유산으로서 또는 문화공간으로서 실질적인 효과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비판적 보도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해 처음 불거져 재조명된 아이유의 표절 논란은 아이유의 곡과 국내의 아티스트의 곡을 비교하는 영상이 유포되면서 온라인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표절 관련 고발장 접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12일 방송된 뉴스위치에서는 가수 아이유가 음원 표절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아이유 측이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일 "고발인은 작곡가가 아닌 오로지 아이유만을 상대로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고발인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고발 대상이 된 곡은 '분홍신'과 '좋은날', '삐삐' 등 6곡이며, 고발인은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11일 방송된 뉴스메이커는 더욱 자세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기사는 지난 8일, 아이유가 음원 표절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고발인은 아이유가 관련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사는 고발 배경에 대해선 "여러 차례 표절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은 채 문제를 제기하는 SNS 게시물 등을 삭제하도록 해 결국 고발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과거 '분홍신'의 경우 지난 2013년 공개된 직후 해외 뮤지션 벡타의 '허어스 어스'와 유사한 부분이 많으며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고 전하며 유명 작곡가인 방시혁, 김형석 씨 역시 아이유 씨를 지지하고 나선 사실을 전했습니다.

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발장은 6곡의 인트로가 곡의 분위기, 정체성,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표절 의심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팬들과 전문가들은 표절 의혹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급된 유사점이 표절이 아니라 음악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과 클리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가수 겸 제작자인 박진영씨가 작곡하고 아이유가 부른 '섬데이'를 표절곡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노래들이 아이유가 작곡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작곡한 곡이 대부분이며 악보를 비교하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표절의혹이 제기된 작곡가는 유사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비교 편집한 유튜브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다른 작곡가로부터 표절 시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비난의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표절은 개인적인 고소이기 때문에 제3자의 고소나 고발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유의 표절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표절의 정의와 해석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음악 작곡의 주관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유사성만을 기준으로 표절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업계 내에서 공유되는 창작과정의 특성이 이러한 유사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저작권 소유자와 무관한 일반 시민에 의해 고발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표절 사건은 일반적으로 원저자 또는 법에서 지정한 개인이 직접 고소해야 하므로 제3자 고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법적인 측면과 음악의 창작 특성을 모두 고려한 조사가 중요합니다. 아이유 표절 논란의 해결 여부는 가수의 명성회복 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 내에서 유사한 분쟁을 처리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역시 이러한 다양한 사안의 관점을 더욱 자세하게 다뤄서 단순한 의혹의 전달이나 나아가 논쟁을 확산하는 것이 아닌 그 해결과 이해를 위한 매개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요계 표절 분쟁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후속 보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 연일 신기록을 갱신하는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역시 그들의 빌보드 차트 기록 갱신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뉴스현장에서는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가 빌보드 '핫 100' 차트 19위에 올랐으며, 지난 3월 '핫 100'에 처음 입성한 이후 7주 연속 차트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41위에서 스물두 계단이나 상승해 케이팝 걸그룹 단독 곡으로는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3일 뉴스13에서도 영국 오픈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8위를 차지했다고 전하며, 이 차트에서 K팝 걸그룹으로서 최고 순위를 달성했는데, 일주일 만에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였습니다. '큐피드'는 틱톡 등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도 8주 연속 진입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틱톡의 급증하는 인기는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트렌드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업 마케팅 전략의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K-pop 마케팅에 있어서 틱톡과 같은 숏폼 플랫폼의 등장은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전문성 있는 후크, 댄스 챌린지, 릴레이 퍼포먼스 등 K팝의 기본 요소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간결하고 매력적인 콘텐츠에 중점을 둔 TikTok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들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즉흥적인 플랫폼의 특성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규모 케이팝 기획사는 이러한 플랫폼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입니다. 피프티피프티는 작년에 비교적 초라하게 데뷔했음에도 불구하고 '큐피드'라는 곡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팬층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 플랫폼의 영향을 크게 받은 피프티피프티의 성공 사례는 케이팝 산업에서 여전히 중소형 기획사의 전략적 기획과 아이돌의 개인적 매력이 중요하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의 분석에 있어 차트 성적에만 집착하거나 바이럴 마케팅의 성공이라고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차트 실적에 대한 반복적인 업데이트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 미디어 보도는 K-pop 마케팅 전략과 산업 분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있는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정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보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도 연예계의 실적 전달 중심의 형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있는 보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3. 05. 28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00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근 다양한 정책에 대해 여·야가 앞다투어 현수막을 통해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현수막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4일 뉴스에서 정부 대책에 대해 전하고, 이어 15일 뉴스를 통해 규제 강화 이후의 모습도 전했습니다. 먼저 4일 <뉴스 리뷰>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정당 현수막 설치 장소 제한이 사라지면서, 주요 교차로에 현수막 설치가 집중되었는데요. 전동 키포드를 타던 시민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1만 4천여 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정당 현

수막은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교통 신호기나 도로 표지 등을 가리면 안됩니다. 또 사고 취약 지역인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설치를 금지합니다. 강풍으로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로등 1개 당 현수막을 2개까지만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8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는데, 많은 내용 중에 주요한 부분을 잘 정리하여 보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설치 및 관리 방안 안에는 '정당 현수막의 의미'를 정의해주어, 설치 가능한 주체를 설명하고 해당 주체의 역할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 명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도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도한 것인데,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배경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보행 안전보호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에 있습니다.

이처럼 보도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가장 주요한 추진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 실시 이후의 모습도 취재하여 보도하였는데, 15일 <뉴스 투나잇>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는, 정당 현수막 규제가 강화된 지 일주일 후의 현장 모습을 취재하여 전달했습니다. 현장을 살펴보면, 유동 인구가 많은 시장 건너편 도로에, 정당 현수막이 여러 개가 걸려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일 정도였습니다. 직장인이 몰려 있는 대도심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차량이 우회전하는 도로에서, 낮은 현수막 때문에 다가오는 보행자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 더 큰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도로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통 약자가 자주 다니는 어린이와 장애인, 노인 보호 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해선 안 됩니다. 이처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당 현수막의 설치 장소와 위치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정을 요구한 후, 이행되지 않으면 직접 철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역부족이라는 게 지자체 반응입니다. 정당 현수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여럿 발의돼 있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가이드라인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시 이후 현장을 취재하여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보도의 경우 현장감이 중요한데,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들을 다양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여러 위치와 보도, 차도 등을 보여주었고, 특히 취재하는 기자가 직접 줄자를 들고 바닥에서부터 현수막까지의 거리가 1미터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자체가 직접 철거할 수 없다는 부분과, 관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지만 진전이 없다는 부분도 지적했는데, 해당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도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G7 정상회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데,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는데, 그만큼 G7 정상회의 성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해당 내용에 대해 논의한 22일 <뉴스 포커스> 살펴보겠습니다.

대담은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 위원과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함께하여, G7 정상회의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원영섭 위원은 '이제 운동화 끈을 땀다'라고 평하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방향의 긍정적인 출발임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권지웅 위원은 '들러리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담은 이러한 평가를 내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원영섭 위원은 G7 정상회의에 초대가 되었다는 점과,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에 최초로 일본과 공동 참배를 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권지웅 위원은 G7 국가 외 추가로 초대된 8개 국가에 우크라이나가 포함되는 등 이번 회의에서는 반핵 메시지가 강조되었는데, 그 가운데 원전 오염수 관련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오지 못한 점이 부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 지지율 상승에 대한 평가, 원전 오염수 시찰단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가 엇갈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각 대변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된 메시지들을 다시 확인하고 그에 대해 반박하거나, 대담에 참여한 각 전문가의 발언에 대해서도 바로 반대측 의견을 물어보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칫 엇갈린 평가만 주고받을 수 있는 주제였으나, 상대의 발언을 확인하고 반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덕분에 뉴스를 듣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뉴스를 비평해보는 평가원의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의의 공과를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대담에서, 앵커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혹시 잘못 전달될 수 있는 단어나 발언에 대해서 앵커가 되묻기를 하거나 다시 한번 정리하는 등의 모습으로, 의미가 확장되거나 왜곡되지 않게 해주어 전달력을 높였습니다.

정부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18일 <뉴스 위치>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독사는 2017년 2,412건에서 2021년 3,378건으로 약 40% 급증했습니다. 특히, 2021년엔 고독사의 59% 가까이가 50~60대였습니다. 이에 정부가 돌봄 서비스를 통한 중장년 고독사 감축 방침을 내놨습니다. 목표는 제작년 사망자 100명당 1.06명인 고독사 수를 4년 뒤 0.85명까지 20% 낮추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중장년을 대상으로 돌봄, 병원 동행 같은 일상생활 부담을 경감해주는 생활지원 서비스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력 사용량이 현저히 줄면 안부를 묻거나, 이장·반장·통장 등 지역 대표자들을 고독사 예방 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복지

부는 고독사 실태 파악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브리핑 전문을 살펴보면, 정부는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와 실태조사 등으로 고독사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두었습니다. 다양한 내용 가운데 연령 분석 결과 전달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이 연령별 차이였고, 이를 전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정보의 중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자칫 고독사 대책이 아닌 중장년 대책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고독사에는 연령 변수보다는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는 환경 변수가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분석은 19일 <뉴스 현장>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대답에는 조미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이 함께 했습니다. 조미정 전문위원은 고독사 위험군이 152만명에 달한다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고독사 사망 사례에 어떤 이들이 포함되었느냐를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고독사의 비중은 주로 독거노인이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연령과 다소 상관없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독사 비율이 가장 높은 50~60대 중장년층에 대해서도 부모의 사망, 자녀의 독립, 본인의 퇴직 등 주변의 변화가 가장 큰 세대로 이러한 부분에 집중하여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고독사 위험군이 1인 가구 5명 중 1명꼴로 분석된 가운데, 해당 수치가 어떻게 도출된 결과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조사 대상이나 분석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되었으나, '위험군'을 분류한 기준도 함께 설명해주었다면 수치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p>일시/장면설명</p> <p>2023년 5월 7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p> <p>2023년 5월 14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김홍태 시청자평가원 국민행동 정책대담 / 변호사</p>	 <p>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세상에 지나지 않는 대한민국, 한국인들입니다</p>
<p>일시/장면설명</p> <p>2023년 5월 21일 04시/ 이동준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p> <p>2023년 5월 28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이동준 시청자평가원 세상에 지나지 않는</p>	 <p>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세상에 지나지 않는 대한민국, 한국인들입니다</p>